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노후·고립·가난 '삼중 감옥'

1만 3920세대 조사... 1인 가구 5년만에 65%로 치솟아
입주민 80% 질병 시달리고 95%는 자녀 부양능력 없어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중 80%가량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율이 65%에 달하고 노인 혼자 거주하는 집도 많아 제대로 된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일을 못하고, 자녀마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등 '가난의 대물림'도 심각한 상태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최근 발주한 '광주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대다수는 질병과 장애, 나이 탓에 근로 능력이 없고 주민의 80% 이상이 법정 빈곤층이지만 시설이 낡고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영아파트 3곳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8곳 등 모두 11곳에 1만3920세대(2만여명)가 거주하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눈에 띄어야 할 점은 1인 가구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고령화하고 있는 현상이다. 독거노인 등 근

로 능력이 없는 주민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남아 가난과 고립, 장애와 질병으로 가득 찬 '도심 속 섬'처럼 살고 있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 주택이지만 대부분 시설이 낡고 생활여건이 나빠 젊은 층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광주지역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조사에서는 40%였던 1인 가구 비율이 5년 만에 65%로 치솟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중 1인 가구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며 "장애와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도 80%에 달해 '고독사'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마무리된 광주지역 단지별 주거급여 세대 중 1인 가구 비율은 ▲쌍촌주공 78% ▲쌍촌시영3단지 73% ▲금호시영3단지 71% ▲우산주공3단지 74% ▲두암주공2단지 79% ▲두암주공4단지 79% ▲오치주공 1단지 76% ▲각화주공 81% ▲하남주공1단지 75% ▲하남시영2단지 73%였다.

주거비조차 벌지 못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혼자 살고 있는 셈이며 이들의 건강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영구임대 65세 이상 의료 수급자 2750명 중 보건복지부가 시급하다고 여겨 집으로 직접 간호사가 파견, 집중관리하는 방문간호대상자가 950(34%)명에 달했다.

또 주민 대다수는 건강이 나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등에게 나라가 주는 일자리인 자활근로도 제대로 하지 못해 11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368명만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었다. 자녀마저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 광주지역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 8114세대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6232가구의 부양의무자 1만7575명 중 95%인 1만6790명은 부양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1615명도 부양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한 사회복지사는 "일정 규모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없어야 수급자가 되는 탓도 있지만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돈을 벌어 부모를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모시는 선순환 구조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면서 "자녀도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해 결국 부모가 살던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가난의 대물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광기자 kroh@kwangju.co.kr



D-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막바지 점검 4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나흘 앞두고 전시관계자들이 '기아 디자인 아트웍스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부터 10월2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미래들(futures)'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대폭 강화 도시공원 아파트·상가숲 변질 막는다

국토교통부 개선안 이달 시행
환경 고려·경쟁 방식도 도입
광주시 2단계부터 개선안 적용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다. 고층아파트 일색의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각 지역에 마찰과 갈등이 확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단 오는 8일로 예정된 1단계(수광·마북·송암·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2단계부터 개선안을 적용시킬 방침이다. 다만 1단계 사업이 보류 또는 반려되면 개선안으로 다시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은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기존안보다 공공성 강화, 경쟁 강화, 환경 고려, 제안서 평가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먼저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결로를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안에서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협의의무로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차 공고를 의무화해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가 주택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최대 15점 이상

으로 확대하고, 총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 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 확보를 차단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하반기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군 당국, 北 핵실험장 정밀타격 훈련

현무·슬램-ER 미사일 동원
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군은 4일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을 가상타격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3, 8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사격에는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동원해 상 목표 지점에 사격을 실시해 명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 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 지점을 향해 실시됐다"며 "유사시 적의 도발 원점 및 지휘

지원세력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는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이 동원됐다. 훈련은 전날 합참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군사적 조치다.

한미 연합군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들이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북 핵 대응 조치에 대해 "미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실질적인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2017년 9월 5일부터 선착순 판매

NAVER ·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

문의 1544-4226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평신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